

안티조선(가제)전 2차 공문

이런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하철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라는 피켓을 들고 다니는 '전도인' 보듯 합니다. 사회적으로 '의제화'되지 않았거나, 그럴 필요-혹은 수준이 안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나치게 나서서 떠든다는 것이겠습니다.(이 정권의 하수인 운운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각설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보기 싫다, 입니다. 또는 그런 문제는 거드리면 건드릴수록 커지거나 덧나는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냥 두는 것이, 그 힘으로 다른, 시급한, 사회적 문제에 신경 쓰는 것이 현명하다고도 합니다.

요즈음 '안티조선' 운동을 바라보는 시선들은 교차하고, 때로는 그 교차점들이 서로를 착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티조선' 운동을 하는 분들이 이 운동을 하는 이유나 반응의 스펙트럼은 그렇지 않은 분들의 그것만큼 넓습니다. 단지 개인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공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으며, 근본적인 공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안공간 풀에서 '안티조선'(가제)전을 하는 이유는 우선 이런 다양한 관점을 사회적으로 의제화 시키는데는-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이 주도하는 논의가 아니라-역시 다양한 장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며 그 논의들을 통해 비교적 정리된 운동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동력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운동 차원의 불매운동에서부터 넓은 의미의 언론개혁운동에 이르기까지 각 자의 입장에서 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울러 대안공간 풀은 '안티조선' 운동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건 junk food 바로 알리기 운동과 유사하다"

(junk를 한컴사전에서는 '허섭쓰레기'라고 뜻풀이 해놓았더군요) 따라서 저희는 조선일보와 그로 대표되는 집단이 안고 있는 허섭쓰레기성(?)을 일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일단은 생각합니다.

이번 대안공간 풀에서 열리는 '안티조선'(가제)전은 그 신문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그들의 냉전적 사고방식과 이를 조장-냉전체제에 대한 고무, 찬양이겠지요-하는 행태에 가급적 초점을 맞추려 합니다. 조선일보는 방법적으로는 다채로운 모습으로-더 정확히는 분열적으로-남북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본질적으로는 수구, 반동적인 태도에서 한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참고 기사 별첨)

저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그러한 조선일보의 보도태도, 또는 냉전적 세계관에 대한 통찰과 비판, 그리고 이를 넘어서기 위한 전망 등을 작가 여러분의 작업을 통해 기대합니다.

앞서 보내드린 공문에서도 이야기되었듯이 언론의 문제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하루빨리 사회적 공론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작가 여러분의 진지한 작업을 통해 우리 사회가 진일보할 수 있는 기반을 두텁고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공간·풀 올림

다음은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의 '조선일보모니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기타 정보는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www.urimodu.com

www.antichosun.or.kr

1. '경제위기론' 불모, 인도주의 외면, 억지주장으로 일관한 '쌀지원 관련' 보도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으로 60만톤의 대북 쌀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몇몇 신문들이 '국회동의'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나 1990년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면 통일원장관이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다. 즉 국회 동의와 효력이 같은 예산심의의 심의를 거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면 이중 법적용이 되게 된다. 이번보다 2배이상의 액수를 지원했던 95년의 경우에도 이런 법논리에 의해 국회동의없이 지원한 바 있다.

95년 당시 조선일보는 6월 18일 <쌀 보내려는 마음>이라는 사설에서 "대북 쌀 지원은 그야말로 순수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북한이 식량난을 겪고 있고 식량이 모자라면 외부로부터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그러한 북한에 동포애로 식량을 지원할 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은밀히 협상할 일이 있으면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것도 좋고, 북측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큰 일 날 것이 아닌 한 들어주는 신의도 보여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 쌀을 지원함으로써 당장에 어떤 성과를 기대해서도 안된다. 북한에 쌀을 보내면서 우리의 진심이 화해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만으로 만족해도 좋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인도적 차원에서 전제와 조건없이 지원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물론 이 논조들은 나중에 지원되는 쌀의 국적 표기문제, 균량미 전용의혹, 인공기 계양 사건 등을 빌미로 부정적 입장으로 선회하고 말았다.

최근 대북 쌀지원과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지원결정 이전부터 경제위기론을 들어 대북지원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남북협력기금사용에 대한 국회동의와 북한의 작황파악 등을 주장하며 비판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9월 28일 사설 <"대북쌀" 왜 어물어물했나>에서 조선은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또는 국회동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으니깐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려했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리고 남북협력기금이 차관형태로 지원이 되려면 국회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얼핏 그럴듯하지만 들리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남북협력기금법 전반의 내용과 조선일보의 일련의 논조를 종합 고려해볼 때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쌀 지원을 반대하는 입장의 또 다른 표현으로 풀이될 뿐이다.

북한당국과 국제기구의 발표에 의하면 올해 식량부족분은 240만톤에 달한다고 한다. 이미 일본에서도 50만톤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객관적 흐름이 조선일보에는

전혀 통하지 않는 분위기다. 28일 4면 기사 <"북한 작황부터 파악을">과 29일자 4면 1단 <대북지원 방침 이랬다 저랬다>에서 조선은 240만톤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당국의 발표와 국제기구의 보고서에만 의존한 것"이라며 국제식량계획(WFP)의 발표까지 불신하는 '담대함'을 보였다.

이전에도 북한 작황을 파악한 10월 중순 이후 결정하자고 주장해왔던 조선의 주장은 북측과의 조율과정이나 지원품의 구입, 선적, 분배 등의 과정을 생각하면 적절한 지원시기를 놓치기 쉽다. 이는 여야간의 지리한 대치로 등원조차 못하던 정치상황에서 국회동의를 거치라는 주장이니 그야말로 시간끌기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명백히 인도주의에 반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29일자 <'쌀주기'에서 영농지원으로>라는 사설 역시 장기적 과제인 북한 농업의 구조적 개선문제와 단기적인 긴급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혼재하여 쌀지원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 특히 95년 지원불가론의 근거가 됐던 지원품에 대한 국적표기가 이번에 통과됐고, 구두이기는 하나 분배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된 것 등 진일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트레이트기사에서 간단히 언급하는 것에 그쳐 보도의 객관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 면피용 북한섹션? - 기획의도에 못 미치는 "NK 리포트"

조선일보는 일간지 사상 최초로 북한섹션 'NK리포트'를 신설하고 10월 9일자부터 지면배치에 들어갔다. 이미 9월 20일자 사고를 통해 "통일시대 협력 파트너로서의 북한 실체를 폭넓고 깊이있게 소개"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려는 조선일보의 의지"를 담아낸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의도와 달리 실제 북한섹션지면은 지나친 과장과 오보, 단신이나 흥미위주의 기사나 탈북자중심의 기사들이 대부분이어서 '폭넓고 깊이'있는 보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메인지면의 논조와 섹션의 논조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본 지면의 대북강경논조에 대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NK 리포트 섹션]이 있던 9일 조선일보는 <'노동당 행사'와 정부의 무원칙>이라는 사설을 통해 "과거에 북한이 취해왔던 대남전략상의 방식과 다를 바가 없다"며 북의 정당,시민,사회단체 초청을 비판했다. 같은 날 사설에서는 이처럼 적대적 논조를 펴고 섹션 지면에서는 '통일시대 협력파트너', '차이점을 인정'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섹션 지면에서는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실조를 걱정하는 기사와 아이들의 사진을 실으면서 본지에서는 식량지원에 반대하는 기사를 꾸준히 실는 태도도 마찬가지로 모순을 보여준 것이다.

이 지면을 채우고 있는 내용 역시 북한의 실체를 이해하기 보다는 남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통일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깊이있는 분석기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기자 한명이 4개의 기사를 쓰고, 작성자가 표시되지 않은 기사들도 여럿 있었다. 충분한 준비 속에 탄생했다기 보다 급조된 듯한 느낌이다. 메인 기사들 대부분을 외부필진이 쓰는데 다수가 탈북자들이다. 우리가 남한사회의 모든 부분을 알 수 없듯

이 탈북자들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부분적이고 때로는 편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외부필진의 대부분을 탈북자들의 글로 채우는 것은 객관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나머지 기사들도 <"남한남자 자상 여자들이 살기 좋은 세상">임을 주장하는 탈북처녀의 인터뷰나 <김일성 가문의 뿌리는..> <북한 말 한마디> 등 흥미위주의 가벼운 기사들이 주류를 이룬다.

아울러 지나친 과장이나 오보도 발견할 수 있다. 1면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진 <북, 최고 인기학과는 김일성대 종교학과>의 경우 "종교학과의 인기는 단번에 최고조에 달했다... 예외없이 평양에 거주하며 육체노동에서 해방되고 .."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전문기자에 따르면 북의 최고인기학과는 남자의 경우 정치경제학부, 여자의 경우 어문학부이며 그 뒤를 이어 법학부나 외국어문학부, 종교학과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육체노동에서 해방' 주장 역시 명백한 오보라는 지적이다. 왜냐하면 북한은 교육과정에 농촌노동이나 건설노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이라면 어느 누구도 육체노동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아울러 기사말미에 경제학부의 정치경제학과를 설명하면서 "김위원장이 졸업한 학부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학부는 모은 행사 등에서 가장 우대받으며 졸업생들은 거의 모두 당 간부로 발탁"된다는 주장 역시 지나친 과장이라는 지적이다. 기사에서 "가장 권위있는 학과"라고 언급했듯이 경제학부의 목적자체가 간부양성이기 때문에 졸업 후 당간부로 발탁되는 것 자체가 당연한 것이지 김위원장이 졸업했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화려한 기획의도를 내걸은 [NK리포트]는 그야말로 말잔치 기획에 그쳤을 뿐이다. 지나치게 가볍고 흥미성 짙은 기사에 잘못된 내용 그리고 본지의 반복 대결논조를 은폐하는 수식어로 가득한 이 지면은 최근 대외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조선일보에 대한 비판,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탄지걸기식 보도를 보인다는 일련의 비판에 대한 무마용으로 해석되고 있다.

3.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초청 관련 보도

- 객관적 상황 변화 읽지 못하고 구태의연한 해석으로 일관 -

북한 노동당이 창건 55주년을 맞이하여 남한의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들을 초청했다. 대부분의 신문들이 통일전선전술이 아니냐며 북의 초청의도를 의심했고 조선일보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조선일보는 10월 4일자 5면 『북초청 전문가 분석』이라는 타이틀로 <"통일전선 구축 일환인 남분열 속셈"/"김정일 통일지도자 부각 노린 것"/"논쟁거리 던져 남북관계 시간 벌기"> 등의 제목을 달았다. 부정적 해석 일변도다. 같은 날 <북의 '정치행사' 대비해야>라는 시론 역시 북의 초청배경을 두고 "우리사회의 내부분열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고 단정짓고는 남남분열의도가 있으니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북한과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남한체제 중심의 시각과 과거 적대적 관계의 구태의연한 시각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번 초청장에는 미군철수나

보안법폐지 주장이 빠지는 등 북한의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진전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 여전히 달라진 남북관계에 적합하지 않은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방북 승인에 대해 무원칙하다며 집중비판했다. 7일자 기사수첩 <노동당의 초대장>과 9일자 사설 <'노동당 행사'와 정부의 무원칙> 이 대표적 사례다. 특히 9일자 사설에서 조선은 북한의 초청을 "과거에 취해왔던 대남전략상의 방식"이라고 단정하고 정부가 불허방침에서 허가로 다시 바뀐 것을 원칙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처음에 불허방침에서 방북을 허용한 정부의 조처는 단순히 입장이 변했다며 비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환영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 혹은 화해와 교류,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마당에 공식적인 초청에 대해 오히려 처음부터 정부가 허가방침을 내리지 않은 것을 비판하는 게 개선되는 남북관계의 흐름에 더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남북간에 다방면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부터 언론사 사장까지 노동당 총비서의 초청을 받아 방문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은 지금 수교국을 확대하고 있으며 북미 관계 역시 획기적인 진전을 보이는 등 긍정적 변화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당, 시민, 사회단체의 초청에 대해 유독 정치적 해석을 들이대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남북한 관계의 획기적 진전에 발맞춰" 북한 섹션까지 발행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구태의연한 남북 대결관계에 기반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시각은 새 시대를 열고있는 남북의 행보를 지체시키고 더 나아가 통일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추신: 전시 중인 11월 24일(금) 오후 3시부터 대안공간 풀 전시장에서는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와 함께 하는 '조선일보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작가 여러분 및 문화 예술인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